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8호

발행일: 2022. 11. 4. (금)

제400회 국회(정기회, 2022. 9. 1. ~ 2022.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재난안전 관리

나.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다. 모빌리티 혁신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1. 개관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본회의에서 44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화주 등이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소방대’를 구성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의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44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행정안전위원회(17)	<a href="#">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2		<a href="#">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3		<a href="#">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		<a href="#">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5		<a href="#">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6		<a href="#">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7		<a href="#">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강준현 의원 등 10인
8		<a href="#">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a>	서범수 의원 등 11인
9		<a href="#">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백혜련 의원 등 10인
10		<a href="#">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a>	민병덕 의원 등 16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	<a href="#">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주환 의원 등 13인
12		<a href="#">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전주혜 의원 등 11인
13		<a href="#">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영배 의원 등 10인
14		<a href="#">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a>	황운하 의원 등 10인
15		<a href="#">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16		<a href="#">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17		<a href="#">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18		<a href="#">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주철현 의원 등 23인
19		<a href="#">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a>	주철현 의원 등 23인
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a href="#">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1		<a href="#">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2		<a href="#">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3		<a href="#">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개호 의원 등 10인
24		<a href="#">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a>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25		<a href="#">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26		<a href="#">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태호 의원 등 10인
27		<a href="#">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a>	권명호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8	국토교통위원회(13)	<a href="#">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형두 의원 등 10인
29		<a href="#">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신영대 의원 등 11인
30		<a href="#">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신영대 의원 등 10인
31		<a href="#">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32		<a href="#">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33		<a href="#">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34		<a href="#">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35		<a href="#">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상훈 의원 등 11인
36		<a href="#">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현승 의원 등 14인
37		<a href="#">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a>	태영호 의원 등 10인
38		<a href="#">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종배 의원 등 11인
39		<a href="#">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40		<a href="#">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권명호 의원 등 10인
41		<a href="#">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형두 의원 등 10인
42		<a href="#">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a>	진선미 의원 등 13인
43		<a href="#">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교흥 의원 등 11인
44		<a href="#">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교흥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 관리,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모빌리티 혁신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재난안전 관리

#### 개요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호우·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더불어 산불,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이나 발생 우려 시 초동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새 정부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등을 국정과제로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들이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 정책이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하는 지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u>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2-10-27 (원안가결)

2	행정안전위원회	<p><u>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u></p> <p>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간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장비의 원거리 정비 등으로 인한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10-27 (수정가결)
---	---------	--	----------------------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 과제목표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행정안전부, 2022. 7. 26.)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추진배경

사회 복잡성 증가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필요

※ 태풍·호우특보 증가('18495회→'19609회→'20794회), 최장기간 산불('22.3월, 213시간) 등

주요 내용

- [과학적 재난대응]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기반 마련**
  - (플랫폼)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 \*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1,953종 데이터
  - (상시점검) 침수 등 위험징후를 상시·사전 감지하기 위한 IC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170개소, 연내)
  
- [선제적 안전관리] **국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대전환 추진**
  - (국민체감)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전대진단 기간(8~10월)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통합
    - \* 건설현장 2,000여개, 산사태위험지역 2,200여개, 전통시장 580여개 등 24,000여개소
    - (점검내실화) 기관별 분산 실시 → 전국 동시 실시(8~10월), 확인점검 강화(민관합동)
  - (실전역량) 위급상황시 현장 대응능력 및 실전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교육·복제\* 등 개선
    - \* 현장 활동성을 고려하여 민방위 복제 개편 추진('22.8월 을지연습 시범적용)
  
- [수요자중심 제도개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체계 전환,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등 수요자를 고려한 실질적 제도개선**
  - (보행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7.12.),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
  - (재난피해자) △주택복구비 상향 △피해산출 기준 금액(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변경 검토 △소규모 식당 재난희망보험 도입(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

➔ 부처·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혁신 추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2.

## 참고 자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 제출안: [자체소방대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2021. 4.

이종성 의원안: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근거 마련](#) 2022. 9.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 2.

정부 제출안: 법률상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 등

[새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국정과제 정책 우선순위 도출 및 제언](#) 한국행정연구원 「KIPA 이슈페이퍼」 2022. 5.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재난 및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이 연계된 초대형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 정부 역시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를 제시, ‘재난 안전’은 향후 주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정부, 민간과 학계 15명의 재난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AHP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기후변화·기술재난에 관련된 안전관리 역량강화’와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복합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9. 16.

□ 2022년 8월 8일~1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의 도시침수는 현재보다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임

□ 이번 도시홍수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통합 추진 체계 미흡, ② 복수의 중대본 운영, ③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 ④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체계 훼손 등이 제기됨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법률상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시홍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재난문자 발송주체 간 업무분장 및 발송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 넷째,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 보상 및 지원체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1. 12. 10.

주요 외국의 재난 관련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재난 피해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살펴서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또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안해 보았다.

[풍수해 재난대응체계의 현황과 검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9. 25.

2020년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과 풍수해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응예산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계의 추진 및 운영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6. 10.

본 연구는 부처별 재난안전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2014년 12월 신



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0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0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개정안, 정책 개선안 등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나.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 개요

정부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밝혔고, 지난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국회 입법이 눈길을 끄니다.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a href="#">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p> <p>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p> <p>※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p> <p>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p>	2022-10-2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뿌리산업 분야의 청년인력 고용 지원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년의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p> <p>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p> <p>청년의 중소기업 창업·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함.</p>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 과제목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 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 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국무조정실, 2022. 10. 26.)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1 희망 | 청년의 “튼튼한 미래” 복원

### 일자리

#### 청년 취업 역량 강화

- ☑ 민간협업 일경험 활성화
- ☑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강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조기제공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 구직단념 청년 지원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 ☑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 교육

#### 신산업·신기술 미래 혁신인재 양성

- ☑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 ☑ 민간협업 기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 교육비 부담 완화

- ☑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 ☑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 주거

####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 청년중심 공공분양 확대
- ☑ 청년층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 청년특화 주거지원 확대

- ☑ 주택구입·전세대출 확대
-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주거품질 및 주거보호망 강화

- ☑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 ☑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 복지

#### 취약청년의 도약지원

-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지원
- ☑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 청년 도약계좌 신설
- ☑ 병사 자산형성지원(25년 205만원)

## 2 공정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 ☑ 「공정채용법」 추진
-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3 참여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 ☑ 청년보좌역 배치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출처: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2022. 10. 26.

## 참고 자료

###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5.

### [2020년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결과 창업부문](#) 중소기업부 정책연구 2021. 12.

### [‘청년이 미래다’ 중소기업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소기업부 뉴스 2022. 10. 26.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0. 1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중소기업부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예산과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준비된 가벼운 청년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2022. 9. 2.

■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취업난과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 중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가중되었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증가
-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 주거 · 교육 ·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

■ 본고는 청년 창업 현황을 바탕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의 실제 창업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요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 청년 창업은 시장 진입 · 퇴출이 쉬운 생계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금융 안정성과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청년 창업은 폐업률이 높은 음식점, 대리 · 중개 · 도급업, 소매업의 비중이 높으며, 기술기반업종 창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청년세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으며, 창업 시 자금확보에 대한 부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세대의 부족한 창업 준비 기간과 창업 교육 경험은 미흡한 경제적 성과로 귀결됨

- 29세 이하의 창업 준비 기간이 가장 짧았고, 창업 교육 경험도 부족함
- 대학 창업 강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론 ·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학생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 대비 미흡

■ 본고는 상기 청년 창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청년 창업 정책 방향을 제시

- (준비된 창업 유도) 대학은 창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필요
- (실패용인 문화조성) 나의 실패를 공유하고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조성
- (창업경험 경력인정) 창업 리스크 축소를 위해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청년정책 간 연계) 청년 창업 정책은 다부처 청년 정책과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1-01 2021. 6. 4.

-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임.
-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 권익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다. 모빌리티 혁신**

**개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또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국회 입법도 엿보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모빌리티 혁신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p><u>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p> <p>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자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p>	2022-10-2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2	국토교통위원회	<p><b><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b></p> <p>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p>	2022-10-27 (원안가결)
3		<p><b><u>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u></b></p> <p>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0 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p>	2022-10-27 (수정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 과제목표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 주요 내용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 [120대 국정과제]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과제목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 주요 내용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 (제도) 안전·보험·보안 ▲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 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 제고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2. 7. 18.)

<이동(모빌리티) 혁신>

-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추진위원회 출범(6.30), 8월 중 로드맵 발표
- 완전자율차(LV4, '27), 도심항공(UAM, '25) 상용화
  - 연내 부분자율주행차(LV3) 우선 출시 등 성과 조기 가시화\*
  - \* 일본('21.5, 100대 한정), 독일('22.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시 전망
-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등 실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중진)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 → (개선) 전국 허용, 안되는 지역만 일부 규정
-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 선정(1~2개), R&D·제도기반(법, 안전기준 등)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 달성
-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現 화물차·이륜차로 제한)
- 도심 물류시설설치 규제 완화(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 등 설치 허용)

도심항공(UAM)



자율차



로봇배송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2.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국토교통부, 2022. 9. 19.)



출처: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2022. 9. 19.



## 참고 자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4.

이헌승 의원안: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4.

조승천 의원안: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근거 마련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9.

김상훈 의원안: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 인하 등

[2022년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2022. 8.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022. 10. 5.

프랑스는 2021년 8월, 「기후 이변에 맞서는 투쟁과 그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회복력법’)을 공포하였다. 기후·회복력법은 소비, 생산과 노동, 이동, 거주, 취식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 부문에서는 크게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육상 화물운송 및 항공운송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후·회복력법의 이동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각 이동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교통정책을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국민 개인이 친환경적 이동방안을 고려하여 행동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국토연구원 「도로정책 Brief」 2022. 9.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다. 동법 제73조 제4항에서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야는 자동차·도로교통, 철도교통, 해상교통(항만 포함), 항공교통(공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2011년에 수립·고시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의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자동차·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4. 22.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2017. 12. 27.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과제임.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외 입법·정책적 성과를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한 후, 앞으로의 법·제도적 변화 방향과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 10.

항공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들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항공기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UA)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목표로,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용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제도를 개발 중이다. 국제적으로 드론시장은 이미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에어택시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종사 혹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연구가 드론(무인비행장치), 소형 에어택시 및 중·대형 무인항공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은 비교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급에 해당하는 드론에만 편중되어 추진되었고, 최근 들어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중 일부인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담당부서가 다르고 무인항공기에 대한 용어나 정의도 혼재되어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항공기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및 제도 수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에어택시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 등과 관련한 기술 및 법제도 개발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 운송산업의 정의와 전반적인 법제도, 제작 및 운항, 안전기술 등의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운송산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 새정부 교통정책 종합토론회](#) 한국교통연구원 종합토론회 자료 2022. 7. 5.

■ 발표 2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 | 김영호 |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